

勞 動 經 濟 論 集
第22卷 (2), 1999.12, pp. 189~208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실업문제의 경제학적 분석과제

어 수 봉*

< 목 차 >

- | | |
|----------------------------|--------------------------|
| I. 본고의 초점 | IV. 부문별 실업구조와 관련된 질문과 과제 |
| II. 급격한 실업률 상승과 관련된 질문과 과제 | V. 실업의 영향과 관련된 질문 |
| III. 실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질문과 과제 | VI. 실업대책과 관련된 질문 |

I. 본고의 초점

1998년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6.8%, 실업자수는 1,461천명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대비 실업률은 4.2%p, 실업자수는 905천명 증가하였다. 이는 1997년 말에 그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금융외환위기가 불과 1년 동안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우리 나라 경제는 지난 35년간 고도 성장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그간 노동수요 증가 추세는 노동시장에의 신규공급을 흡수한 것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노동력을 유인하기에 이르렀다(어수봉·권

*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혜자, 1995). 본격적인 공업화가 시작된 1963년 이래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은 실업률 수준과 변화 현상으로 보아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1963년부터 1973년까지이다. 1963년 8.5%에서 시작된 실업률이 경제의 경공업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70년대 초반 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둘째 시기는 제1차 오일충격이 시작된 1974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구조로 전환되면서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하락하여, 실업률은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4%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시기는 3저 호황이 시작되는 1986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인구증가의 감소 및 고학력화 등으로 노동공급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반면 고도성장은 지속되어, 실업률이 2%대의 완전고용수준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업 분야의 저기능 생산직 부족이 심화되어 단순기능 외국노동력이 국내로 유입했던 시기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지난 3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최근의 실업률 급상승은 우리 나라 경제사회가 경험하는 초유의 사건인 것이다. 본고는 노동시장의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경제학자가 던져야 할 유의미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살펴본다.

여기서 살펴볼 질문은 우선 수요부족(deficient demand)에 따른 대량실업이라는 최근의 현상이 임금경직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재진입하는 경우 실업률은 다시 하락하는가, 그리고 직업별, 산업별, 성별, 학력별 등 부문별로 실업구조가 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등이다. 다음으로 실업의 영향은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총체적 효과는 어떠한가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실업의 제반측면과 전망을 고려할 때 유효한 실업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이라는 맥락속에서 살펴보면서 선진국의 그간의 경험을 참고한다. 노동경제학적 이론은 실업문제 및 정책대안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자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II. 급격한 실업률 상승과 관련된 질문과 과제

우선 본고는 최근의 실업현상은 금융위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환위기로 이자율이 급증하면서 금융경색이 심화되어 한계기업이 도산하고,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위축(소비감소)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노동수요가

급격히 감소(demand deficiency)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1998년 9월 현재 농림어업을 제외한 비농가부문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전년 동월 대비 1,311천 명인데서(약 7.0% 감소) 확인된다. 즉 일자리 감소(job destruction)가 최근 실업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했을 때 고전경제학 모형에서와 같이 임금이 즉각 하락한다면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임금경직성(wage stickiness)에 달려있는 것이다. 최근의 실업이론에서는 임금경직성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실업현상을 경제의 균형현상(unemployment equilibrium)으로 이해한다.¹⁾

실업이 발생하면 초과공급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하여 균형이 회복된다는 고전경제학의 균형이론은 케인즈의 임금하방경직성의 발견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Bernard Corry, 1996). 이후 근대경제학은 임금이 왜 하방경직적인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시작하며, 탐색이론(search theory)이 실업균형의 미시경제학적 기초(microeconomic foundations)를 제시한 이래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된다.

탐색이론의 출발점은 정보의 불완전성(incomplete information)이다. 탐색이론에서는 시장임금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 때 직장탐색자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게 나타나며 따라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실업은 탐색자의 생애효용극대화의 결과이며, 따라서 실업은 탐색이론이 노동공급자의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은 노동수요자(기업)의 불완전한 정보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에 그 근거를 둔다.

기업은 종종 근로자의 생산성을 채용시절에 완전하게 알 수 없거나(adverse selection problem), 혹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완전하게 관찰할 수 없다(moral hazard problem). 이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해 채용비용(recruitment cost) 혹은 감독비용(monitring cost)을 높여야 하는데 이러한 인사관리 비용보다 근로자에게 시장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임금전략이 더 비용절약적일 수 있다(Milgrom and Roberts, 1992: 248~87). 우선 채용측면에서 보면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응시자에게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다” 라는 시장신호(market signal)로 작용하게 되어 채용결과 실제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효율임금은 역의선택 문제를 방지하는 기제(mechanism)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독측면에서 보면 효율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일의 해태(shirking on job)가 가져오는 비용(즉 해고)은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임금(즉 시장임금) 보다 높은 임금의 상실로 나타난다. 따라서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도

1) Layard, Nickell and Jackmen(1991), Sinclair(1987), Guy Routh(1986)는 실업균형이론에 대한 문헌연구를 보여준다.

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효율임금은 시장임금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 때문에 나타나며, 그 결과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Shapiro and Stiglitz, 1984).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모델은 효율임금의 한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 아니라 훈련비용(training cost) 혹은 이직에 따른 비용(turnover cost) 등의 거래비용 때문에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Stiglitz, 1986). 여기에서 비용발생은 기업이 지불한 기업특수적 훈련 때문이다. 이와 같이 효율임금모델은 고전경제학이 가정했던 무거래비용(no transaction cost)을 완화하고, 근로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거래비용을 모형에 내부화(internalize)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효용극대화를 만족시키는 균형실업(equilibrium unemployment)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보의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미래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경직성(sticky wages)이 발생한다는 것이 암묵적 계약이론이다(Azariadis, 1975). 이 모델에서 위험기피적(risk averse)인 근로자는 생산물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임금(variable wage)보다 상황변화에 무관한 고정임금(guaranteed wage)을 선호한다. 이때 기업이 위험중립적(risk neutral)이라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고정급이라는 일종의 소득보험(income insurance)을 판매하는 것(암묵적 계약)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불황기에도 임금은 하락하지 않으며 그 결과 균형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균형실업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탐색이론, 효율임금이론, 혹은 암묵적 계약이론 등은 모두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금경직성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실업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이론 외에도 실업현상(history of unemployment) 자체가 실업을 고착시킨다는 부상이론(hysteresis theory) 혹은 내부자 - 외부자 모델(insider-outsider model)이 OECD의 실업현상을 설명하는 최근의 이론인데 본고에서는 실업의 장기화 측면에서 이 이론을 살펴보게 된다.

한편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arguments), 노조독점이론(union monopoly arguments), 혹은 일자리 경쟁이론(job queuing arguments) 등이 균형실업이론의 현실적 적합성을 비판하면서 노동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실업발생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이질적 노동 때문에 시장이 1차와 2차 노동시장으로(Doeringer and Piore, 1971), (job competition)이 심하고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줄(queue)이 길어져서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Thurow, 1975). 그러나 이들 이론은 노동시장 분절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이라는 한계가 주어진다. 만약 분절현상을 모형에 내부화(internalize)한다면, 이들 이

론 역시 모두 균형실업이론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질임금이 하락한 증거가 있는가? 1998년의 경우 임금교섭업체 중 85% 이상이 임금동결 혹은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섭임금상승률 역시 -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1998). 따라서 1998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7.5%를 감안하면 근로자의 평균 실질임금은 약 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과 관련된 유의미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혹은 실업이 해소되기에는 임금의 하락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Keynes(1936)의 설명과 같이 향후 물가하락(deflation)이 진행되면서 실질임금이 다시 상승하여 결국 하방경직성이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경직성이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향후 실업대책의 설계에 중요함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²⁾

III. 실업구조 변화와 관련된 질문과 과제

경제사회적 충격으로 경제전체의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실업구조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노동경제학에서 실업구조란 대개 실업기간 분포(duration distribution of unemployment)와 부문별 실업분포(sectoral distribution of unemployment)를 의미한다(Layard, Nickell and Jackman, 1991: 34~60). 현재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실업기간에 관한 통계는 현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현 시점은 대량실업의 초기단계이고 따라서 관찰되는 대부분의 실업기간은 기대실업기간(expected duration) 보다 훨씬 짧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업기간의 추정은 실업에서의 탈출률에 의해 가능하다.³⁾

1998년 경제활동인구조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어수봉(1998) 및 신동균(1998)은 경제외환위기 이후 실업에서의 탈출률은 약 30%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어수봉(1998)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를 사용한 반면, 신동균(1998)은 연결된 패널자료(panel data)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는 비슷한 수준의 탈출률

2) OECD(1994)의 Jobs Study에서는 OECD 국가의 임금조정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노조, 법·제도, 임금교섭구조, 상품시장구조, 사회복지제도, 최저임금, 노동시장정책 등의 측면이 임금유연성(혹은 경직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3) 어수봉(1994)은 탐색이론적 모형에 기초하여 탈출률로부터 기대실업기간을 추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료에 적용한 바 있다.

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실업구조분석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추적자료(longitudinal data) 혹은 연결파넬자료 대신에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도 부문별 실업구조의 기간분석은 가능함을 시사한다.

신동균(1998)은 연결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실업탈출자 30% 중 20%는 재취업으로 그리고 나머지 10%는 비경제활동상태로 탈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탈출률 추정에 기초한 기대실업기간 즉 평균적인 실업자가 실업상태에 머무는 기간은 약 3.4개월로 추정된다. 다음의 <표 1>은 이러한 실업기간 구조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이와 관련한 중요한 질문은 향후 고실업상태가 지속되면서 기대실업기간이 장기화될 것인가,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면 기대실업기간은 다시 하락할 것인가이다.

<표 1> 실업에서의 탈출과 유입('98 1~6월)

(단위: 천명, %)

	1~2월	2~3월	3~4월	4~5월	5~6월
전월실업자총수	930 (100.0)	1,230 (100.0)	1,360 (100.0)	1,421 (100.0)	1,488 (100.0)
실업상태유지	635 (68.3)	840 (68.3)	988 (72.7)	1,012 (71.3)	1,015 (68.2)
취업으로 탈출	184 (19.7)	281 (22.8)	282 (20.7)	304 (21.4)	336 (22.6)
비경활로 탈출	111 (11.9)	110 (8.9)	90 (6.6)	105 (7.4)	137 (9.2)
탈출합계	295 (31.6)	391 (31.7)	372 (27.3)	409 (28.7)	473 (31.8)
금월 실업으로의 진입	532	492	433	448	501
취업에서	317	308	272	275	307
비경활에서	215	184	161	173	194
실업증가	237	101	61	39	28
취업부문	133	27	△10	△29	△29
비경활부문	104	74	71	68	57

자료: 신동균(1998)에서 재정리

1980년대 고실업을 경험한 선진국가들의 경우 실업문제의 핵심은 장기실업문제로 귀결된다. 이는 경제가 회복되어도 취업되지 않는 장기실업자가 경제사회적 비용을 높이기 때문인데, 가령 극단적인 경우 2년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1984년)은

벨기에 41.9%, 이탈리아 23.8%, 영국 22.5%로 나타난다(OECD, 1997). 신동균(1998)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자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1997년 15.6%에서 1998년 22%, 그리고 1999년에는 31.2%로 증가하게 된다.

다음의 <표 2>는 정상균형상태에서 실업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실업에의 유입 및 탈출구조에 따라 평균실업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평균실업기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구조가 <표 2>의 유형 I에서 유형 II~V의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경제회복기에도 장기실업문제는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OECD 선진국에 있어 1980~90년대에 경험한 장기실업화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는 전망이다(OECD, 1994).

<표 2> 동일실업률하 정상균형상태에서의 다양한 실업구조 (취업자수 20,000천명 및 실업자수 1,500천명의 경우)

(단위: 천명, %)

유형	평균 실업기간	월간 실업유입자	월간 실업탈출자	월간 실업유입률	월간 실업탈출률	실업률
I	3개월	500	500	2.5	33.3	7.0
II	5개월	300	300	1.5	20.0	7.0
III	7개월	214	214	1.1	14.3	7.0
IV	9개월	167	167	0.8	11.1	7.0
V	12개월	125	125	0.6	8.3	7.0

그렇다면 경제충격으로 인한 고실업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장기실업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인가? 부상효과(hysteresis effect)로 대표되는 최근의 실업 이론은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Cross and Hutchinson, 1988). 한 경제의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 흔히 기술, 경제, 사회제도 및 경제적 충격의 형태 등의 설명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들 요인을 통제한 후의 실업률은 무작위 걸음(random walk)을 해야한다. 그러나 많은 경험연구에서 실업률의 시계열자료가 로그전환(logistic transformation)혹은 시간요인통제(detrend) 이후에도 자연실업률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 즉 실업자신의 역사(history of unemployment itself)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에 기초하여 과거의 실업이 현재의 실업에 미치는 효과(hysteresis effect)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실업부상이론(hysteresis theory)이다.

실업부상이론 역시 균형실업이론과 마찬가지로 실업이 일단 발생하면 지속된다는 사실을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의 결과로 설명한다. 실업부상이론 역시 다양하지만 내부자-외부자모델(insider-outsider model)과 선별기구모델(screening device model)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내부자-외부자 이론은 경제충격으로 기업이 근로자 규모를 줄이는 경우(즉 실업발생), 남아있는 근로자(내부자)는 과거보다 더 좋은 조건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이다(Lindbeck and Snower, 1988).

즉 동일한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직장 정착율은 이전보다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내부자는 임금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실업자그룹(외부자)이 더 낮은 임금을 제시하더라도 기업은 이들을 내부자와 대체하지 않는 데 이는 내부자의 기업특수적 기술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부자-외부자 모델은 노조의 독점력이라는 설명요인을 배제하더라도 고용조정과정에서 기업에 필요한 근로자가 선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이직비용이 크기 때문에 임금경직성이 발생하고, 따라서 일단 증가한 실업은 지속된다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선별기구 모델은 장기실업자일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의 발견에서 출발한다(Blanchard and Summers, 1987). 실업 그 자체가 기업에게 저능력 신호(low-quality signal)로 작용하는 경우 기업은 가능한 한 실업자의 채용을 기피하고, 이는 실업이 실업을 귀결하게 만든다(Toetsch, 1988). 즉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흠집(scar)을 알리는 선별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실업이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장기실업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OECD(1994)의 연구에서와 같이 고용관련 법이나 제도, 실업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 교섭구조, 노동시장정책 등도 한 경제의 장기실업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발견은 아직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OECD, 1994). 그러나 장기실업은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자연실업을 및 임금을 상승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신동균, 1998).

OECD(1994)는 장기실업의 처방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어수봉, 1997b). 여기에서 장기실업문제와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관련 법·제도는 장기실업을 초래할 것인가? 그렇다면 장기실업 방지를 위해 어떠한 법·제도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우리 나라의 교섭구조에는 내부자-외부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어떠한 임금제도(가령 성과배분제도)가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하여 외부자 혹은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가? 기업의 채용기준과 관행에 실업이 선별기능을 하고 있는가? 즉 실업기간 분석에 있어 시간의 존성(time dependency)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는 단지 관찰되지 않는 근로자의 특성(heterogeneity)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잘 정비된 자료 특히 추적자료(longitudinal data)가 필요하고 동시에 엄밀한 계량분석경험 연구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 실업구조분석 모형인 해저드모델(hazard model)은 적용할 수 있는 실업자 추적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구조분석이 진전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⁴⁾

IV. 부문별 실업구조와 관련된 질문과 과제

경제적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산업, 직업, 학력, 성, 혹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일자리 파괴(job destruction)와 실업증가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어수봉, 1998). 여기에서는 성과 종사상의 지위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여성의 경우 경제충격으로 인한 취업감소는 1998년 9월 현재 63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2% 감소로 나타나는 반면, 남성의 취업감소는 62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0% 감소로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없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남자실업자는 784천명(264% 증가)이고, 여자실업자는 329천명(196% 증가)으로서 남성의 실업증가현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요약하면 최근 여성은 실직확률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실업확률은 남성보다 낮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실직 후에 비경제활동인구화될 확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이다. 다음으로 1998년 3~4월 기간 동안 여성의 실업탈출률은 약 35%수준이고 남성의 25%수준 보다 높게 나타난다(어수봉, 1998). 따라서 여성의 평균실업기간은 약 3개월로서 남성의 4개월보다 짧다. 이는 한편으로는 여성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탈출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 및 일용직으로 취업할 확률 역시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성별 실업구조와 관련된 질문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의 실직확률은 왜 남성보다 높은가? 이는 노동시장의 차별(여성우선해고등) 때문인가 아니면 생산성에 따른 선별인가? 다음으로 여성은 왜 비경제활동인구화할 확률이 남성보다 높은가? 실업선언(declaration of unemployment)이 가져다주는 이익(혹은 불이익)은 성별로 차이가 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최근 류기철(1998)과 방하남(1998)은 그간 누적된 고용보험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시계열상의 일관성 부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의 재취업구조를 연구한 바 있다. 한편 금재호·조준모(1998)는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이직의 효율성(efficiency of turnover)에 대한 실증연구를 한 바 있다.

실직 후 비경제활동인구화된 여성은 잠재실업자(hidden unemployment)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비경제활동인구인가? 어떻게 이를 검증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경험연구는 실업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의 남녀 차별관행이 고용조정과정에 반영되는 경우, 즉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한계적 지위(marginality status)가 실업구조에 그대로 투영되는 경우, 노동시장지위에 기초한 사회복지제도(가령 근속기간에 따른 실업급여지급)에서도 여성은 다시 한 번 그 한계적 지위를 노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성별 실업구조에 영향이 있다면, 여성친화적(female-friendly) 실업대책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별 실업구조를 살펴보자. 1998년 9월 현재 1년 미만 전직 실업자는 1,284천명이고 이중 임시·일용직에서의 실업자는 891천명으로 전직 실업자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시점에서 전체 취업자중 임시·일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9.2%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충격이 임시·일고의 일자리 파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한계근로자에게 경제충격의 부담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OECD(1994)의 발견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실업발생의 이론 중 내부자-외부자 모델이 우리나라의 최근 실업현상을 설명하는데 상당수준의 설명력을 갖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OECD(1994)의 정책제안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가 실업대책으로 유효한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 논리적 역설(paradox)이 발견된다. 즉 임시·일용직 노동시장은 가장 유연한 시장인데 왜 실업률이 가장 높은가? 다시 말하면 임시·일고시장에서는 빠르고 또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도 쉽게 이루어짐을 고려한다면 높은 실업률과 유연 노동시장은 어떻게 양립가능한가?

물론 이 현상이 고용조정기간 중의 일시적 현상이라면 양립할 수 있고, 따라서 충격이 경제내부화되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전직 종사상 지위별 실업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V. 실업의 영향과 관련된 질문

실업이 실업자 개인과 가족에게 소득감소와 같은 직접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범주의 증가 등을 통해 한 경제사회에 대해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역시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업의 영향에 대해 많은 경험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특수적(group-specific) 실업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Sinclair, 1987: 34-6). 또한 실업의 직간접 비용과 실업대책의 비용을 비교하는 실업대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도 실업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실업효과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질문은 한 경제가 실업을 경험하면서 소득분배 및 실질임금의 분포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Freeman(1996)은 미국경제가 1980~90년대의 고실업시대를 경험한 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저학력, 청소년층의 실질임금이 저하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OECD(1994)는 대부분의 회원국가에서 임금격차(wage inequality)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 주면서 임금격차가 확대되어야 저기능 실업자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1998년 우리 나라 평균 실질임금이 약 10%정도 하락하게 되면 국민경제적 소득격차는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 이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 격차의 확대 때문인가? 아니면 근로자간 임금소득격차의 확대 때문인가? 향후 경제회복이 진전되면서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재정·조세·금융정책 등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경제정책의 방향에 중요한 시사를 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실업자 개인 혹은 가족에 대한 실업효과는 기능, 근로의욕, 소득, 타가 구원의 노동력상태 등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건강, 범죄, 자살 등 사회심리학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O'Brien, 19 . .) 가령 가구주의 실업으로 감소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 혹은 자녀가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부가노동효과(added worker effect)는 어느 정도인가? 부가노동효과를 초래하는 의중 임금(reservation wage)의 하락에 기여하는 경제사회적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정부의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혹은 임금보조금 등)은 부가노동효과 혹은 실망근로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보유기능·기술의 손실(skill loss)의 정도와 이로 인한 취업확률의 저하는 어느 정도인가? 실업기간 동안 받는 직업훈련은 취업확률을 어느 정도 제고하는가? 즉, 실업자 직업훈련은 효율적인가? 그리고 실업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임금수준은 이전보다 상승하는가 아니면 하락하는가?(Chowdhury and Nickell, 1985)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실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실업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특히 장기실업방지를 위해 시급한 연구과제임에 틀림없다.

실업의 사회적 비용은 자살,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의 훼손, 범죄, 이혼 등의 가족해체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령 1930~31년 사이의 대공황시절 폴란드 바르샤바의 자살률은 18.3%로 1928년의 5.2%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바 있다.(Sinclair, 1987 : 34) 그리고 Platt(1984)는 실업과 자살률(혹은 자살시도율) 사이

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후, 이 두 변수간 강한 정의 상관관계(strong positive correlation)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리고 실업이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지만(Moylan et al., 1984), 실업자 가구의 유아사망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는 종종 발견된다(Singer, 1937). 한편 실업이 정신적 건강을 훼손한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O'Brien, 1986). 예를 들어 Jackson and Warr(1984)는 심리적 좌절상태(distress)가 실업 후 증가한다고 하면서 실업기간 동안 정신적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영국, 미국, 캐나다의 경우 실업률과 교도소 입소자와의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어 실업이 범죄증가의 한 원인임을 보여준다(Sinclair, 1987:36). 마지막으로 실업이 가정해체(가출, 이혼, 별거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연구는 이 종종 발견된다(예를 들면 O'Brien, 1986).

이와 같은 실업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나라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실업률(socially tolerable level), 즉 사회안전선(social security frontier)은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이를 결정하는가 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안전을 유지하는 최대실업률 개념은 실업대책의 하나의 준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업대책의 재정지출 규모는 물론, 실업대책의 수단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특히 고용보험제도, 교육·의료, 사회부조 및 사회복지제도 등의 각종 경제사회제도가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검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질문이다.

실업의 사회심리학적 영향분석은 실업대책의 수단별 대상단위(Programme-specific scope)의 결정에 중요하다. 즉 실업대책이 실업자 개인 혹은 실업자 가구 중 어느 대상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할 때 제반 사회경제적 실업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어느 수준(개인, 가족, 혹은 사회구성원 전체)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는 가구단위별 가구원의 노동력상태 및 소득상태와 노동력상태를 동시에 조사한 자료이다. 전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력 통계조사(가령 경제활동인구조사 등)가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전국적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1998년 5월 현재 가구주 실업자는 실업자중 46.8%이며, 이중 가구원 중 취업자가 전혀 없는 경우가 28.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조사는 실업자의 가구상의 지위에 따른 실업대책의 차별화(즉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게 되며, 동시에 부가노동효과를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그러나 가구소득(재산소득 및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등)이 가구의 노동력상태와 동시에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대책의 집행(가령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소득기준(Means test)의 설정이 어려우며 실제로 소득기준을 실업대책사업에 부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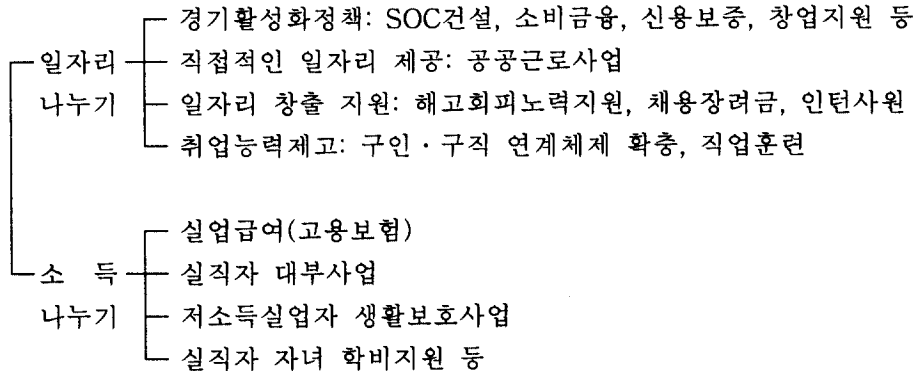
VI. 실업대책과 관련된 질문

실업대책이란 경기하강 혹은 구조조정 국면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가 시장의 힘에 의해 자동 해결되지 않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노동수요(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실업자에게 직접적인 소득보전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경제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실업대책은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때문에(반대로 호황기에는 실업 감소로 재정지출 축소) 경기의 자동조절기능(built-in stabilizer)을 하여 경제적 안정(economic stability)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실업대책은 직장탐색(job search)기회 확대 및 교육훈련(job training)제공 등을 통해 실업자의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높이고, 한편 실업대책은 실업자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 및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실업대책은 일자리가 있거나 혹은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공적 자금을 실업자에게 일자리 혹은 소득을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운영원리(working mechanism)는 국가차원에서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혹은 소득 나누기(income sharing)이다. 즉 일자리 나누기(혹은 소득 나누기)는 불황기에 임금이 하락하는 시장현상에 의해 궁극적으로 달성되지만 조정기간이 오래걸리거나, 임금경직성 때문에 임금하락이 실업을 흡수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의 처방으로서 정부가 조세 및 재정지출이라는 수단으로 임금조정을 강제하여 국가전체의 일자리 나누기(혹은 소득 나누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노동부, 1998)을 일자리 나누기와 소득 나누기 원리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OECD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원리에 의한 실업대책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그리고 소득 나누기 원리에 의한 실업대책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구분한다(OECD, 1997). 실업대책 지출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OECD 주요국가는 20~50%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경우(1998년)는 80%에 이르고 있다(Martin(1998).⁵⁾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지출 가운데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60.5%)과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11.2%)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실업대책은 선진국에 비하여 생산적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업대책이 과연 효과적이거나, 즉 실업대책의 세 가지 목표(경제적 안정유지,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안전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경제학적 논쟁은 Keynes(1936)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1998)은 실업대책 사업을 위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노동시장개혁중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동연구원(1998)은 실업의 사회적 비용측면을 중시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사업의 확충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재정적자 규모 확대)가 갖는 거시경제적 및 산업정책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실업대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자연실업률에 관한 논쟁과 연결된다(Nickell, 1988). 이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의 존재문제, 혹은 달리 말하면 실업대책이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연실업률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를 결정하는 요인

5) 네덜란드(25%), 스웨덴(51%), 독일(36%), 프랑스(42%), 캐나다(30%), 영국(29%), 미국(39%), 일본(20%)

은 무엇이고, 그 수준은 얼마인가? 등의 거시경제학적 질문은 실업대책의 효과성은 물론 그 필요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과제이다(조우현·조준모, 1988).

한편 실업존재의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는 균형실업이론(탐색이론, 효율임금이론 등)에서는 자연실업률은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주체의 합리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업대책을 제시한다. 가령 실업급여기간의 단축이 실업자의 직장탐색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급여기간 단축을 통해 실업기간이 짧아지고 따라서 실업이 감소할 수 있다(Topel, 1985).

그리고 제도적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이중노동시장이론, 노조독점이론 등)에서는 실업감소를 위해 1차 노동시장의 시장장벽을 제거하는 대책(가령 차별금지 감독 강화)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실업의 시장신호를 중시하는 이론(내부자-외부자이론, 선별이론 등)에서는 실업이 나쁜 시장신호로 작용하지 않도록 실업기간동안의 직업교육훈련을 대안으로 제시한다(Lindbeck and Snower, 1990).

이와 같이 실업대책의 정책수단별 효과성은 실업의 발생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업대책 수단의 선택에 있어 실업의 발생근원의 분석이 중요한 것이다. 한편 실업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업대책 수단을 선택하여 집행한다고 해서 그 정책수단이 정책입안자의 의도한 방향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Martin, 1998; Nicaise et al., 1995). Nicaise et al.(1995)은 그 이유로서 실업대책 프로그램에의 접근성의 제약(barriers to entry), 정책수단과 대상실업자와의 불일치(mismatches between provisions and needs), 형평성과 효율성과의 딜레마(equity-efficiency dilemmas), 실업대책의 한시성 및 고착효과(dead-end provisions and stigma effects) 그리고 대체효과(replacement or substitution effects) 등을 제시하면서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OECD의 사회정책연구팀장인 Martin(1998)은 OECD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수단별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실업대책 프로그램(공공근로사업, 임금보조금, 직업훈련, 실업급여)에 관한 경제학적 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공공근로사업(public works)의 경우 이 사업이 실업자 규모를 줄이는데 그리고 소득보호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부가노동효과의 규모, 실업자의 의중임금 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잠재적 실업자(혹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공공근로사업에의 참여는 이 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실업자에 대한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s)로 작용하고, 그 대체효과 정도는 공공근로사업의 보상가격과 두 집단의 의중임금 수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임금보조금(wages subsidies) 정책은 고용보

협의 채용장려금 사업과 인턴사원 수당지원 사업이다. 이러한 임금보조금 정책의 효과성은 임금보조를 받는 실업자가 기존근로자(혹은 취업예정자)를 어느 정도 대체(replacement)하는가, 그리고 임금보조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효과(wage-push inflation)를 갖는가에 달려있다. Layard(1988: 96~112)는 영국의 경험을 토대로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임금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면 임금인상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업의 총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조건하에서 임금보조금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총고용이 증가하더라도 개별 근로자 사이의 대체효과는 존재할 수 있으므로 총고용 변화만으로 임금보조금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임금보조금 정책의 대체효과 분석은 그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상특수적 직업훈련이 그 대상실업자의 현재 및 미래의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어느 만큼 제고하는가, 그리고 재취업시 훈련의 임금효과(training effect on wages)는 어느 정도인가에 답하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의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에 대한 평가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경로(job path)에 대한 추적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사업에 대한 경제학적 질문은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이다. 최근 류기철(1998)은 고용보험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의 실업급여 사업이 재취업을 지연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최근 그 적용대상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전산자료의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류기철(1998)의 결론은 매우 잠정적이다.

실업급여의 실업기간 효과분석에 있어 계량경제학적 질문은 실업기간에 따라 탈출률이 낮아지는 관찰결과가 시간의존성(time dependence) 때문인가 아니면 표본의 관찰되지 않은 특이성(unobserved heterogeneity)때문인가이다(Heckman and Borjas, 1980). 따라서 실업급여의 실업기간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누적된 추적자료와 고도의 계량분석 기법이 필요하게 된다.⁶⁾

6) 본고는 실업 분석이나 실업 대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와 더불어 집필된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한국노동연구원, 1998)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 금재호·조준모(1998), 「조기퇴직자의 이직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명언·노연희(1998),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활동」, 한국 심리학회 '98 연차대회 발표논문, 843-61.
- 노동부(1998a), 「타결임금 인상보고」, 노동부 내부자료.
- 노동부(1998b), 「'98실업대책사업 종합안내」
- 류기철(1998), 「실업급여 수급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양상」, 한국경제학회 발표논문
- 방하남(1998),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급여수급 및 재취업실태분석 : 1996~97년도」, 한국노동연수원, 정책연구 98-21.
- 신동균(1998a), 「최근(1~8월) 실업구조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신동균(1998b), 「실업의 장기화 방지대책」,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pp.217~241.
- 어수봉(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어수봉(1994), 「한국의 실업구조와 신인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4. 12.
- 어수봉(1997a),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미발표 논문
- 어수봉(1997b),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과제」, 「노동경제논집」, 제20권 제2호, 365-98.
- 어수봉(1998), 「최근 실업구조 분석」, 미발표논문
- 어수봉·권혜자(1995),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정책」,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훈구·이혜주(1998), 「한국 실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 '98연차대회 발표논문, 805~18.
- 이훈구·윤소연·정혜경(1998), 「실직가정 아동과 비실직가정 아동의 정서문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 '98 연차대회 발표논문, 819-410.
- 조우현·조준모(1998), 「신정부 노동시장정책-분석적 정책제안」, 「노동경제논집」, 제21권 1호, 195~227.
- 한국개발연구원(1998),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79~240.
- 한국노동연구원(1998),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Azariadis, C.(1975). "Implicit Contracts and Unemployment Equilibri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119-55.
- Blanchard, O. and L. Summers(1987). "Hysteresis in Unemployment," *European*

- Economic Review, 31: 288-95.
- Blank, Rebecca M. and Richard Freeman(1994). "Evaluating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Protection and Economic Flexibility," in Blank, Rebecca M. ed. Social Protection versus Economic Flexibility: Is There a Trade-Off?,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1-41.
- Blank, Rebecca M.(1994). "Introduction," in Blank, Rebecca M. ed. Social Protection versus Economic Flexibility: Is There a Trade-Off?,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19.
- Buss, Terry F. and F. Stevens Redburn(1988). Hidden Unemployment: Discouraged Workers and Public Policy, New York: Praeger.
- Chowdhury, G. and S. J. Nickell(1985). "Hourly Earnings in the US: Another Look at Unionization, Schooling, Sickness and Unemployment using PSID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 Chu, Ke-young and Sanjeev Gupta(1998). "Social Safety Nets in Economic Reform," in Chu, He-young and Sanjeev Gupta eds. Social Safety Nets: Issues and Recent Experienc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 C., 7-33.
- Cogan, John(1980). "Married Women's Labor Supply: A Comparison of Alternative Estimation Procedures," in Smith, James P. ed. 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rry, Bernard(1986). "Unemployment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An Overview and Some Reflections", in Corry, Bernard ed. Unemployment and Economists, Cheltenham: Edward Elgar, 1-29.
- Cross, Rod and Harold Hutchinson(1988). "Hysteresis Effects and Unemployment: An Outline", in Cross, Rod ed. Unemployment, Hysteresis and the Natural Rate Hypothesis, Oxford: Basil Blackwell, 3-10.
- Davis, Steven J., John C. Haltiwanger and Scott Schuh(1996).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Doeringer, P. B. and M. J. Piore(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Heath.
- Freeman, R. B. and L. F. Katz(1994). "Rising Wage Inequality: The United States versus Other Advanced Countries," in Freeman, R. B. ed. Working under Different Rules,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Freeman, Richard(1996). "Toward an Apartheid Economy", HBR September-October.
- Heckman, J. and B. Singer(1985). "Social Science Duration Analysis," in

- Heckman, J. and B. Singer eds. *Longitudinal Analysis of Labor Market Dat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9-110.
- Heckman, J. and G. Borjas(1980). "Does Unemployment Cause Future Unemployment? Definitions, Questions, and Answers from a Continuous Time Model of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Economica*, 47: 247-83.
- Jackson, P. and P. B. Warr(1984).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Ill-health: The Moderating Role of Duration and Age," *Psychological Medicine*, 14.
- Janoski, Thomas(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Unemployment: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West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ynes, J. M.(1936). *The General Theory of Interest, Employment and Money*, London.
- Layard, Richard (1986). *How to Beat Unemploy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yard, Richard, Stephen Nickell and Richard Jackman (1991). *Unemploym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the Labour Mark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yard, Richard, Stephen Nickell and Richard Jackman (1994). *The Unemployment Cri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indbeck, Assar and Dennis J. Snower(1988). "Union Activity, Unemployment Persistence and Wage-Employment Ratchets, in Cross, Rod ed. *Unemployment, Hysteresis and the Natural Rate Hypothesis*, Oxford: Basil Blackwell, 117-28.
- Lindbeck, Assar and Dennis J. Snower(1990). "Demand- and Supply-Side Policies and Unemployment: Policy Implications of the Insider-Outsider Approach. in B. Holmlund and K. G. Loftgren eds. *Unemployment and Wage Determination in Europe: Labour Market Policies for the 1990s*, Oxford: Basil Blackwell.
- Martin, John P. (1998). "What Works among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xperience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35*, OECD, Paris.
- Milgrom, Paul and John Roberts(1992). *Economic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New Jersey: Prentice-Hall.
- Moylan, S., Miller, J. and R. Davies(1984). *For Richer, For Poorer? DHSS Cohort Study of Unemployed Men*, London.

- Nicaise, Ides et al.(1995). *Labour Market Programmes for the Poor in Europe: Pitfalls, Dilemmas and How to Avoid Them*, Aldershot: Avebury.
- Nickell, Stephen(1988). "The NAIRU: Some Evidence and Statistical Facts," in Cross, Rod ed. *Unemployment, Hysteresis and the Natural Rate Hypothesis*, Oxford: Basil Blackwell, 378-85.
- O'Brien, Gordon E.(1986). *Psychology of Work and Unemployment*, Chichester: John Wiley and Sons.
- O'Leary J. Christopher(1998).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ctive Programs in HUNGARY," Kalamazoo: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OECD(1994). *The OECD Jobs Study: Evidence and Explanations, Part I and II*.
- OECD(1997). *Employment Outlook*, OECD, Paris.
- Phiplott, John(1997). "Looking forward to Full Employment: An Overview," in Phiplott, John ed. *Working For Full Employment*, London: Routledge, 1-29.
- Platt, S.(1984). *Unemployment and Suicidal Behavi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
- Routh, Guy(1986). *Unemployment: Economic Perspectives*, London: MacMillan Press.
- Shapiro, C. and J. Stiglitz(June 1984). "Equilibrium Unemployment as a Worker Discipline Device," *American Economic Review*, 433-44.
- Sinclair, Peter (1987). *Unemployment: Economic Theory and Evidence*, Oxford: Blackwell.
- Stiglitz, J. E.(1985). "Equilibrium Wage Distributions," *Economic Journal*, 95.
- Thurow, L. G.(1975). *Generating In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 Toetsch Inge(1988), "Screening in Labor Markets with Heterogeneous Workers", in Cross, Rod ed. *Unemployment, Hysteresis and the Natural Rate Hypothesis*, Oxford: Basil Blackwell, 180-202.
- Topel, R. (1985). "Un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R. G. Ehrenberg ed., *Research in Labor Economics*, vol. 7, Connecticut: JAI Press Inc., 91-135.
- Trehoerning, Paer(1993). *Measures to Combat Unemployment in Sweden: Labor Market Policies in the Mid-1990s*, The Swedish Institute, Stockholm.
- Weiss, Andrew(1990). *Efficiency Wages: Models of Unemployment, Layoffs, and Wage Dispers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